

第 2 章 韓半島 平和定着 및 統一을 위한 主要 外交活動

第 1 節 友邦과의 協力

1. 韓·美關係

가. 韓·美 關係의 現況

한·미 양국은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라는 공통의 이념과 가치를 바탕으로 지난 45년간 공고한 안보협력과 폭넓은 경제·통상 협력관계를 유지·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국내외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한·미 양국관계도 양적·질적 변화를 겪고 있다. 과거 일방적 依存狀態에 있던 한·미 관계는 한국의 민주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국제적 지위의 향상, 민족 자존 의식의 고양 그리고 최근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안보 및 경제·통상 협력 분야에서 관계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 과정에서 다소간의 마찰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마찰은 양국관계가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過渡期的 陣痛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양국 정부와 국민은 한·미 관계가 가지는 중요성 및 호혜정신에 입각하여 이러한 전통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21세기를 향한 보다 성숙한 양국관계를 도모해 가는 과정에 있다. 정상회담을 비롯한 주요 인사의 빈번한 교류 및 접촉, 한국의 북방정책 및 유엔가입 노력에 대한 미국의 축면지원, 그리고 亞·太協力, 결프사태등 주요 국제문제에서의 협력증대등은 양국관계의 견고함을 잘 반영하는 몇가지 예가 될수 있을 것이다.

1990년중 한·미 양국은 한·소 수교, 한·중 무역대표부 개설 합의,

일·북 修交交渉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의 변화속에서 양국간 협력의 폭을 넓혀가면서 발전적 차원의 동반자 관계를 모색해 나갔다.



백악관에서의 한·미 정상회담(1990. 6.)

나. 雙務關係의 擴大 · 發展

우선, 한·미 양국은 1990년에 한번의 정상회담, 두차례에 걸친 외무장관 회담, 기타 빈번한 고위급 인사들의 교환, 방문을 통하여 급변하는 국제정세속에서 한·미 양국간의 공통이해와 협력관계를 더욱 굳혀왔다.

노태우 대통령은 1990년 6월 상황에서 개최된 한·소 정상회담 참석후 워싱턴을 방문, 부쉬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소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북한의 개방화 유도방안 등에 관해 협의한 바 있다. 아울러 동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對韓 안보공약을 재확인하고, 우리의 북방정책과 통일정책에

對한 미국의 지지와 지원을 확보하는 한편, 북한의 개방화 유도를 위해서는 양국이 계속적으로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한편, 1990년 7월과 9월 두차례에 걸친 한·미 외무장관 회담과 양국의 국방, 경제부처 각료들간의 雙務 協議를 통해 주요현안 문제의 원만한 조정과 해결을 모색하였다. 이와 아울러 對美議會 외교활동을 강화하여 1990년 8월 「루가」 상원의원을 비롯하여 1990년중 약 30여명의 의원들의 방한을 주선한 바 있으며, 1990년 1월 미 의회 도서관에 한국과를 독립파로 설치키 위한 기부금(100만불)을 제공하였다.

다음은 한반도의 안전보장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수 있는 한·미 안보협력 관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한·미 양국은 상호 방위조약에 입각하여 한반도와 역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共同防衛 體制를 공고히 유지하고 있으며, 양국의 이러한 협력은 우리의 안전보장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 왔다. 그러나, 동북아 지역안보 환경의 변화와 우리의 안보·경제적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지난 40여년간 유지되어 온 미국 주도의 한국방위 개념은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미국은 지원적 역할을 하는 개념으로 점진적으로 변경하기로 1990년 2월 양국간에 합의된 바 있다.

이러한 기본 방향에 따라 1차적으로 1992년까지 주한미군의 비전투 병력 7,000여명이 축소되는 등 단계적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板門店 軍事停戰委 수석대표도 1991년 3월 한국군 장성으로 교체된 바 있다.

또한 1990년 4월 내자 호텔 반환에 합의한데 이어, 6월에는 비판의 대상이 되어 온 용산기지의 이전에 합의하였고, 1991년 1월에는 韓·美 駐屯軍地位協定을 개정함으로써 한·미 양국은 상호 존중과 우호의 정신을 바탕으로

보다 건전한 안보 협력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중 특히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의 개정은 협정 체결후 만24년만에 개정된 것으로, 한·미간 현안이 상호 협의와 협력을 통해 만족스럽게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 매우 긍정적인 사례가 되었다.

이밖에도 한·미 양국은 한·미 연합방위 전력 증강을 위해서 공동 방위의 유지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서로 균형있게 분담하는 것이 상호 이익에 부합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우리측은 防衛費 分擔 비율을 우리의 능력 범위에 맞게 점차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한·미 양국간 통상관계는 1989년중 수퍼 301조등 많은 통상현안들이 타결되고, 1990년에도 쇠고기, 통신등 다수의 현안 문제들이 타결되는 등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미국의 일각에서는 1990년 하반기이래 우리 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전개되어온 健全 消費運動이 마치 정부의 영향력하에 전개되는 수입억제 운동으로 오해하여 우려를 표명하였고, 우루파이 라운드 농산물 협상과 관련하여 우리의 입장에 불만을 표시하는 등 양국 통상관계가 다소 경색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마찰과 관련, 정부는 불필요한 한·미 무역 마찰을 해소하고, 우루파이 라운드 협상의 원만한 진전을 위하여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1990년 12월 대통령 특사를 미국에 파견하고, 1991년 1월 韓·美 經濟協議會 같은 주요협의 경로를 통해 정부의 수입자유화와 개방정책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등은 바로 이러한 정책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입장 정립과 제반 적극적인 노력에 따라 전체적으로 볼때 韓·美 通商關係는 개선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는 외교 분야에서의 한·미 협력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다.

한·미 양국 정부는 남북 대화와 우리의 북방외교 추진에 있어서도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미국은 그간 우리의 북방외교의 성공을 위해 계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제공하여 왔고, 한국 외교 지평의 확대가 한·미 양국의 공동 이익을 증진시킨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특히 한·소 관계의 건전한 발전은 한국의 통일·안보·경제·외교 목표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소련을 협력과 선의의 경쟁 상대로 수용하려는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된다는 점에서 미국은 이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도 한·미 양국은 긴밀한 협의하에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 특히 양국은 남북대화가 실질적 진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함께 강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취지하에 지난 1988년 이래 북경에서 진행되고 있는 美國과 北韓 外交官間의 接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북한이 남북대화에 성실히 입하도록 계속 촉구해 오고 있다.

국제사회에서의 양국간 협력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걸프전쟁을 둘러싼 협력을 들 수 있다.

우리는 다국적군과 周邊被害國을 위해 1990년 9월에 2억2천만불의 지원과 154명의 軍 醫療團 派遣을 결정한데 이어, 걸프전의 발발로 전비 수요가 급증함을 감안, 1991년 1월에는 2억8천만불 추가 지원에 더하여 軍 輸送機 5대와 150명의 운영 요원으로 구성된 軍 輸送團의 파견을 결정함으로써 우리의 안보·경제적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지원을 하였다. 걸프 사태와 같은 국제문제에 대한 우리의 본격적인 참여와 지원은 우리 역사상 처음있는 일로서 우리도 이제는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책임과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라는 정책적 고려에서 결정된 것이다.

이러한 것은 바로 한·미 양국이 한반도라는 한정된 지역에서의 협력의 차원을 넘어서 주요국제 문제에 까지 서로를 필요로 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관계로 성숙되고 있다는 한 징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 成熟한 同伴者 關係로서의 韓·美 關係

이상 살펴본 것처럼, 한·미 양국의 관계는 우리나라의 국력신장에 따라 종래의 일방적 수혜관계를 탈피하여 안보는 물론 통상문제 등 제분야에서 호혜적 협력관계로 심화·발전되어 가고 있다.

최근의 급격한 대내외적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韓·美 同盟關係는 우리 국가안보의 근간이며, 미국은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고 지지하는 中樞的 國家일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라는 중요성은 변하지 않고 있다. 21세기를 향한 한국 외교가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전전한 한·미 우호협력 관계는 무엇보다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다.

우리는 변모된 우리의 능력과 위상에 상응하는 국제적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가야할 것이며, 성장된 국가 역량을 바탕으로 한·미간 진정한 同伴者 關係를 모색·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2. 韓·日關係

가. 概 觀

1990년은 한·일 양국간 관계에 있어서 일획을 그은 한 해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1990년 5월 노태우 대통령이 한국의 국가원수로서는 두번째로 일본을 공식 방문, 한·일 양국이 21세기 아시아·태평양시대의 주역으로 부상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우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다.

11월에는 1986년 제14차 회의이래 4년만에 제15차 韓·日 定期閣僚會議가 서울에서 열려,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추진 및 양국간 제반 협안을 매듭짓기 위한 주요 계기가 되었으며,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정세하에서 양국 정부가 호흡을 맞추어 협력관계를 긴밀히 하는 시의적절한 협의 기회가 되었다.

21세기를 지향하는 한·일간 우호협력관계 구축에 최대의 장애가 되어 온 재일한국인 법적지위문제도 1991년 1월16일 시한을 앞두고 고위실무자간에

회의를 거듭한 끝에 1991년 1월10일 카이후 수상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외무장관간에 각서를 교환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타결되었다.

한편, 1990년 9월 가네마루 前副總理의 방북을 계기로 일·북한간 관계정상화 움직임이 가시화됨으로써, 한·일간의 관계는 일·북한수교를 전제로 신시대의 구도를 짜야 하는 전환기적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나. 頂上外交를 통한 未來指向的 兩國關係 構築

노태우 대통령의 방일은 일본의 국내 사정으로 두차례나 연기된 끝에 1990년 5월24일-26일간 2박 3일의 일정으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 국가원수로서는 두번째인 이번 방일은 冷戰의 終熄으로 요약되는 격변하는 국제정세에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국제 질서 속에서 양국관계가 共同繁榮을 이룩하기 위해 성숙된 차원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시대적 인식이 무르익어内外의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었다.

20세기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21세기의 미래지향적 우호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공통인식에 바탕하여, 아끼히또 일황은 궁중만찬사를 통하여 “일본에 의해 초래된 한·일 양국간의 불행했던 시기에 한국 국민들이 겪었던 고통에 대해 痛惜의念을 금할 수 없다”고 언급함으로써 과거사에 대한 책임소재와 뉘우침의 뜻을 분명히 하였다.

한편 노태우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가원수로서는 최초로 일본 국회에서 연설을 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일본 국민 전체에게 바람직한 한·일관계에 대한 대통령의 사상과 철학을 전달하고 제반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솔직하게 언급함으로써 일본 국민의 대한국 認識改善을 위한 커다란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가깝고도 가까운 진정한 동반자 관계구축을 위한 의지를内外국민에게 보여주었다.



일본 국회에서 연설하는 노태우 대통령(1990. 5.)

양국 정상은 두 차례의 회담을 가졌다 한·일 간 過去史 關聯 3大 懸案의 기본 해결 방향에 합의하고 국민적 차원의 인적, 문화교류 확대를 통한 미래지향적 실질협력관계 강화와 국제분야에서의 협력체제 구축에 합의함으로써 한·일 양국이 명실상부한 미래지향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

11월의 정기각료회의에서는 재일한국인문제의 최종적 타결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으며, 경제분야에 있어서도 “한·일 무역·산업기술 협력위원회”의 설치에 합의하는 등 양국간 산업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각료회의에서는 자유토론을 통하여 “바람직한 韓·日關係의 未來像”에 관한 솔직하고 건설적인 의견교환을 행하였는 바, 이는 양국간 21세기의 미래지향적 협력관계의 구축을 위한 좋은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의 연장선 상에서 1991년 1월의 카이후 수상 방한은 20세기를 정리하고

21세기를 준비하려는 양국 노력에 있어 한 단락을 마무리 짓는 의미깊은 것이었다.

양국 정상은 한·일 양국관계가 미래를 지향하는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시대적 인식에 입각하여 첫째, 한·일 양국의 진정한 동반자관계 구축을 위한 교류협력과 상호 이해를 증진시켜 나가고, 둘째, 아·태지역의 평화와 화해, 그리고 번영과 개방을 위한 공헌을 강화해 나가며, 셋째, 범 세계적 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건설적 기여를 중대해 나갈 것 등의 “韓·日 友好協力 3原則”에 합의하였다.

카이후 수상은 3.1운동의 발상지인 파고다공원을 역대 일본 수상으로서는 처음으로 방문 3.1운동 기념비에 헌화 및 묵념을 행하였는 바, 이는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뜻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이고자 하는 카이후 수상의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되었다.

방한기간중 양국 외무장관간에 재일한국인 문제에 관한 각서가 교환됨으로써 오랜동안 현안으로 되어왔던 在日韓國人 法的地位 問題가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

다. 諸般 懸案解決을 위한 努力

1965년의 法的地位協定에 따라 재일교포 3세문제의 해결시한이 1991년 1월16일로 다가옴에 따라, 동 문제는 1990년도에 양국간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논의되었다.

대통령 방일, 외무장관 회담, 제15차 정기각료회의 및 십 수차례의 아주국장 간 회의를 통해 마침내 1991년 1월10일 카이후 수상의 방한기간중 외무장관간의 각서교환으로 동 문제가 타결되었는 바, 3세이하 자손에 대한 영주권의 기속적 부여, 강제퇴거사유의 제한, 재입국허가의 경우 출국기간 연장, 지문날 인제도의 조속 철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사회생활상의 처우 면에서도

교원과 공무원 채용에의 문호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在韓 원폭피해자 지원문제에 관해서는 역사적 경위와 인도적 견지에 비추어 그들이 치료 및 요양 등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본 정부는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40억엔을 지원키로 하였다.

신시대를 향한 진정한 우호협력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활발한 문화교류에서 우러나오는 상호간 인식의 심화와 신뢰구축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바, 이를 위해 한·일 양국 외무부 정보문화국장간 문화교류 실무자회의가 1990년 3월 동경에서 열려 양국간 문화행사 개최문제와 일본소재 우리문화재 반환문제, 일본 대중문화 규제 완화등에 관해 협의했다.

한·일 21세기위원회는 1989년에 이어 활동을 계속하여, 신시대의 한·일 정치, 안보관계, 21세기를 향한 한·일 경제관계의 과제와 전망, 과학기술협력의 전망, 양국간 교류확충을 위한 노력 등의 주제에 관해 세차례의 본회의를 포함한 연구와 협의를 거듭, 1991년 1월7일 최종보고서를 양국 정상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활동을 마감했다.

경제분야에서는 양국 수산청 차장간에 어업공동위가 열려 조업문제, 한·일 어업협정 시행관련 제반문제를 협의했다.

1990년도의 양국간 교역은 대일 수출이 약 186억불, 수입이 약 126억불로서, 대일 적자규모가 1989년의 40억불로부터 60억불로 더욱 확대되는 경향을 보여, 貿易逆調問題의 심각성이 한층 크게 부각되었으며, 이의 해소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일간 산업·과학기술협력을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었다.

한·일 양국국민의 상대국민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21세기위원회의 보고서에도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국민 상호간 서로에 대한 지식부족 및 인식의 부조화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국민일반 차원에서의 상호간 이해 심화를 위해 양국정부가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부각되었다.

라. 東北亞地域을 비롯한 國際舞臺에서의 協力 強化

한·일 양국은 국제정세가 군사력에 바탕을 둔 “힘의 均衡” 시대에서 점차 경제력에 바탕을 둔 “利害의 均衡” 시대로 변모하고 있다는 기본 인식하에 양국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아시아·태평양 시대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 하였다.

양국은 우루파이라운드 교섭을 협상시한인 1990년 말까지 최대한의 성과를 거두어 종결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하여 양국이 특히 농산물분야에 있어서 서로 긴밀히 협조하기로 하였다.

특히, 한·일 양국이 동남아국가 및 동구제국에 대하여 행하고 있는 대외 경제협력 추진과 관련 금후 양국이 구체적인 지원사업 발굴 및 효과적인 지원방식 모색을 통해 상대국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공동으로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양국이 기술, 자본, 경제발전 경험을 상호 보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중국, 소련, 동구 등 북방 사회주의국가 진출시 양국 기업의 공동진출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한편 1990년 10월 가네마루 前副總理의 평양 방문으로 가시화된 일·북한 관계정상화 문제에 관해 우리는 5개 고려사항을 제시, 일·북한 접근이 동북아정세의 안정화 및 남북한 관계진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주의를 환기시켰으며, 일측도 우리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3. 西歐諸國과의 關係

가. 概 觀

서구제국은 우리나라가 독립후 서방 자유세계의 일원으로 성장해 오는 과정에서 정치·경제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를 지원해온 전통 우방국들이다.

그러나 그간 우리나라의 대외관계가 미국 및 일본을 기축으로 이루어져 왔고, 서구제국들은 우리나라에 대해 서방진영의 邊境에서 공산주의의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극동의 후진국 또는 개발도상국이라는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우리의 대 서구제국들과의 관계는 대미·일관계에 비해 다소 소원했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가 1970년대 및 1980년대에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이룩하면서 西歐諸國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시작되었으며, 특히 제6공화국 이후 1988년의 서울올림픽 성공적 개최, 정치·사회 각 방면에 걸친 민주화의 진행, 1989년말 노태우 대통령의 영국, 독일, 불란서등 주요 구주국가 순방 및 동구권 국가들과의 잇다른 외교관계 수립등을 계기로 서구제국들은 우리나라를 동북아의 정치, 경제, 외교의 실세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우리나라와의 동반자 관계를 추구하기에 이르렀다.

1990년중 우리의 서구제국과의 관계를 概觀하면, 이를 국가들은 1990년 중에도 유엔등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유엔가입 입장, 남북한 관계, 북한의 IAEA 핵안전조치 협정체결문제등 정치 외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 이해, 지원하였으며, 양자관계에 있어서도 정치·외교적으로는 영국, 독일등 일부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인권문제에 소극적으로 관심을 표명하는 일 이외에 커다란 현안없이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왔다.

다만,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서구제국과의 경제·통상관계가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EC와의 지적 소유권 문제, 우리나라의 보험·금융시장 개방문제,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율 인하 문제등 경제·통상분야의 현안 타결이 서구제국과의 우호협력관계 유지 및 발전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나. 西歐諸國과의 傳統的 友好關係 強化

정부는 노태우 대통령의 독일, 영국, 프랑스, 형가리등 구주 4개국 공식 방문(1989.11.20-12.2)으로 공고해진 구주와의 동반자 관계 정립을 위하여

1990년에도 정부 및 의회의 주요인사 방문 외교를 추진하였으며 서구제국과의雙務的 協議體制를 강화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를 전개하였다.

대표적인 訪問 招請外交의 예로는 강영훈 국무총리가 1990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아일랜드, 벨지움, 터키, EC등을 공식 방문하여 방문국 국가원수 예방, 총리회담등을 통하여 방문국과의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였으며 1989년 노태우 대통령의 歐洲巡訪 성과를 더욱 확산하는데 기여하였다.

최호중 외무장관도 1990년 8월 2일부터 4일까지 노르웨이를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유엔가입에 대한 노르웨이의 지지를 다짐받았으며, 조선 및 해운분야 협력관계를 심화시켰고, 유엔 총회 참석증 독일(9.24), 아일랜드(9.27), 스페인(9.27)등 외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우리의 유엔가입 문제등에 관한 이들 국가의 지지 및 협력을 확보하였다. 이홍구 대통령 특사는 1990년 8월 26일부터 9월 12일까지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오스트리아등 주요 구주국가를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유엔가입에 대한 이들 국가의 직·간접 지지를 다짐받았으며 한·소 수교현황, 한·중국 관계등 우리의 북방정책을 설명하였다.

기타 국회, 사법부 및 여타 행정부처에서도 많은 主要人士들이 서구 국가들을 방문하여 양국간 관련분야 협력을 증진하는데 기여하였다.

1990년중 서구제국으로부터도 Suy 벨지움 외무장관 고문(4.15-21), Tigrel 터키 국가기획청장(4.16-20), Dalli 몰타 산업장관(4.18-21), Ridley 영국 상공장관(5.8-10), Curien 블란서 과학기술장관(5.10-13), Coelho 폴투갈 대법원장(5.14-19), Giscard d'Estaing 전 블란서 대통령(5.23-26), 블란서 대통령 특사 Renon 국방담당 국무장관(6.12-13 및 12.9-11), Gardin 스웨덴 대외무역장관(8.7-10), Adami 몰타 수상(8.21-24), Collins 아일랜드 외무장관(9.4-8), Five 노르웨이 통상해운장관(9.24-28), Runcie 영국 켄터

베리 대주교(9.28-10.1), Hjelm-Wallen 스웨덴 국제 개발 협력장관(10.9-13), Henri 륙셈부르크 대공세자(10.15-19), Chirac 불란서 파리 시장(전수상) (10.18-22), Mitsotakis 그리스 수상(11.14-15), Caithness 영국 외무부 國務相(12.13-16) 등이 방한하여 우리나라와의 기존의 우호 협력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였다.

다. EC와의 實質協力 關係 強化

1990년에도 정부는 1992년 歐洲 單一市場 완성등 정치·경제 통합 노력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EC와의 실질 협력강화를 위한 외교를 전개하였다.

강영훈 국무총리가 EC 집행위를 방문(7월), 한·EC간 실질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하였고, 한·EC 고위실무 회담(7월)에서는 한·EC간 주요현안 타결을 위한 협상을 가졌고, 한·EC 酒類회의 및 해운회담(5월)에서 양자간 현안협의 및 협력증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한편, 한·EC간 정치 협력 긴밀화를 위한 對話채널 강화 노력을 기울인 결과 1990년 2월에는 주한 초대 EC대사(Gilles Anouil)가 부임하였으며 제2차 한·EC 정무협의체 회의가 종래의 政務總局長級에서 외무장관급으로 격상되어 최호중 외무장관과 EC의장국인 이태리의 De Michelis 외무장관간 뉴욕에서 개최(9월)되었다.

또한, EC와의 관계강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차 EC 및 EC회원국주재 공관장회의를 브رات셀에서 개최(11월)하여 EC주재 공관간 업무협조체제를 강화하였다.

4. 第3世界와의 關係

가. 東南亞地域

1967년 8월 8일 방콕선언에 의해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태국, 필리핀, 싱가폴등 5개국으로서 발족한 아세안은 反共을 전면으로 내세우지는 않았으나, 기본적으로 반공 정권간의 협력체제적 성격을 띠고 있다. (1984년 1월 브루나이가 가입하여 회원국은 6개국이 됨)

정부는 1970년대말부터 이 지역의 地政學의 중요성과 경제협력 동반자로서의 잠재력을 고려, 아세안과의 공식협의체제 수립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1989년 11월 한·아세안 부분별 대화 협의체가 공식 출범하였다.

1991년 1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풀에서 개최된 아세안 상임위에서는 한-아세안 협의체제를 부분협력관계에서 완전협력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하고 우리나라 외무부장관을 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담(1991. 7. 쿠알라룸풀)에 초청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우리의 북방외교 성공에 이은 주요한 외교적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한·아세안 완전협의 체제 출범을 계기로 정부는 아세안 각국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착실히 진전시켜 나갈 것이다.

1990년중에도 동남아제국과의 기존 우호관계를 강화하고 기술협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우리나라는 主要人士 訪問 및 訪韓 招請 外交를 전개하였으며, 그 대표적 예로는 박필수 상공부 장관이 말레이시아를 통상장관회담 참석차 방문(7.25-28)하였고, 이후재 체신부 장관이 태국을 방문(4.14-18)하였다.

또한 동남아제국 주요인사 방한으로서는 리센통 싱가폴 상공·국방장관(4.12-15), Alatas 인도네시아 외무장관(6.23-26), Mahathir 말레이시아 수상(9.11-14) 및 윙칸셍 싱가폴 외무장관(11.22-24)등의 방한이 있었다.

나. 西南亞地域

서남아지역의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베마(1989.6. 미얀마로 國名變更)는 비동맹 운동의 모체인 1955년 반동회의를 인도네시아와 함께 주최하였으며,

1961년 카이로에서 열린 제1차 비동맹 준비회의부터는 상기 4개국외에 네팔이 추가로 참석함으로써 서남아지역은 명실상부한 비동맹 제3세계 중심권역으로서의 위치를 그 태동단계에서 부터 확고히 하게 되었다.

인도는 네루 수상이 비동맹 제3세계의 출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1981년 비동맹 전체 외상회의 및 1983년 제7차 정상회담을 개최하였고, 스리랑카도 1976년 제5차 정상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서남아제국들은 대부분 대남북한 等距離外交 및 엄정중립정책을 견지해 왔었으나, 근년에 들어 우리나라와의 관계 증진이 북한과의 관계 증진보다 자국에 실질적 이익이 된다는 인식하에 우리와의 관계 긴밀화를 추구하고 있다.

유엔 및 비동맹 등 국제무대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우리의 입장을 이해 또는 지지하고 있는 바, 특히 1990년 제45차 유엔 총회시 기조연설에서 인도, 네팔, 미얀마, 부탄이 우리나라의 유엔가입 支持立場을 표명하였다.

고위인사 방문으로는 최호중 외무장관이 인도(3.15-17) 및 파키스탄(3.12-15)을 방문하여 비동맹 및 역내 중심국가인 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였다.

주요 방한 실적으로는 Amaratunga 스리랑카 외무담당 국무장관(7.9-14), Herat 스리랑카 외무장관(7.26-28), Bahar 파키스탄 수상실 감사위원장(8.16-21), Chit Swe 미얀마 농림 및 축수산장관(11.30-12.5)등 6개국에서 23건의 주요인사 방한이 있었다.

다. 中南美 地域

중남미 대륙은 우리의 전통적 외교지지 기반일 뿐만 아니라, 세계 총 면적의 15%, 세계 총 인구의 8%를 점유하고 있고, 막대한 광물 및 농·수산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제3세계 어느 대륙보다 성장 잠재력이 커서 주요 협력대상이 되므로 이들 국가와의 기존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하고 경제·통상협력 관계를

증진하여 왔다.

중남미 국가와의 기존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高位人士 訪問으로는 박준규 대통령 특사의 칠레(3.11), 브라질(3.15) 대통령 취임식 참석, 조순 대통령 특사의 코스타리카 대통령 취임식(5.8) 참석, 박희도 대통령 특사의 도미니카 대통령 취임식(8.6) 참석, 노신영 대통령 특사의 페루(7.28), 콜롬비아(8.7) 대통령 취임식 참석이 있었으며 최광수 대통령 특사는 카나다, 멕시코, 브라질, 알젤틴을 7월24일~8월19일간 방문하였고, 권익현 대통령 특사는 11월15일~12월4일間 파라과이, 브라질, 알젤틴을 방문하였다.

주요 訪韓人士로는 Sucre 베네수엘라 국무장관(1.13-15), Dunkley 자메이카 문교장관(3.14-17), Rachmon 수리남 국회의장(4.9-14), Rodriguez 파라과이 대통령(6.20-22), Jackson 가이아나 외무장관(7.9-11), Ricardo 도미니카 공화국 외무장관(10.17-20), Coldwell 멕시코 상공장관(11.11-13), Montealegre 니카라과 대통령 경제고문(11.11-14), Soares 美洲機構 사무총장(12.2-6), Neri Silveira 브라질 연방 최고 법원장(12.2-6) 등 주요인사 21명이 방한하였다.

중남미 국가와의 실질 경제협력 강화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한-페루 공동위원회(11.15-17)가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바베이도스 경제사절단이 방한(10.21-26)하였고 제15차 한-멕시코 민간 경제협력위원회(10.29-31)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또한 미주기구(OAS) 와의 관계 강화를 위해 Soares 미주기구 사무총장이 방한(12.2-6) 하였는데, 동 사무총장은 체한중 한국-OAS간 美洲大陸 발견 500주년 기념 사업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OAS 사무국에 우리나라의 상주근무직원 파견에 합의하였다.

한편 대 카리브 진출강화 방안 모색을 위해 제14차 카리브지역 연구

마이애미 회의에 김해선 본부대사가 참석(12.4-7)하였다.

의원외교 활동으로는 김봉호(평민당) 의원외 10명의 알젠틴 및 브라질 방문(1.16-23)과 국회 예결위 의원단의 중남미 국가 방문이 있었으며 Morales 콜롬비아 하원의장 일행이 방한(4.17-22)하였다.

라. 中東·아프리카 地域

중동·아프리카 지역은, 세계 총면적의 27%, 세계 총인구의 14%를 점유하고 있으며 특히, 세계 국가수의 절반에 가까운 67개국이 위치하고 있어 1960년대 이래 유엔, 非同盟 등 다자간 외교무대에서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중동·아프리카 지역 국가들과 우리나라와의 관계는 외교관계 수립과 국제 무대에서의 지지 확보라는 초기의 피상적 단계에서 실질 협력관계 증진단계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

중동·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은 현재 대부분 開途國이지만 앞으로 상당한 성장 잠재력이 있으며 우리로서는 원유를 비롯한 각종 광물, 어업, 삼림 자원의 공급원으로 그 중요성이 깊이 인식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현재 건설을 위시한 경제진출 확대의 대상지역으로서 그리고 미래의 수출시장으로서 이 지역에 새로이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고위인사의 방문으로는 1990년중 권영각 건설부장관의 리비아 대수로 2단계 계약서명 및 제2차 한·리비아 공동위 참석차 리비아 방문(2.3-6), 나미비아 독립관련, 南部阿 정세파악 및 대나미비아 관계 개선 타진을 위한 송학원 대사의 나미비아 방문(2.15-3.24), 최영칠 노동부장관의 리비아 방문(6.11-13), 노재원 특사의 對非同盟國 우호증진을 위한 알제리, 예멘 방문(8.6-8), 유종하 차관을 단장으로 한 결프사태 피해국 지원조사단 파견(10.27-11.8)이 있었다.

주요 방한인사로는 Daniel Arab Moi 케냐 대통령(9.17-20)의 방한이 있었으며 Asamoah 가나 외무장관(6.14-17), Mushobekwa 자이르 외무장관(7.18-19), Ssemogerere 우간다 외무장관(10.23-25), Sy 세네갈 외무장관(12.3-6) 등 4개국 외무장관 방한과 Slaheddine Baly 튀니지 국회의장(9.20-24) 등의 방한도 있었다.

중동아프리카 지역 국가와 경제협력확대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제3차 한·이란 공동위원회(1990.2)가 테헤란에서, 제2차 한·리비아 공동위원회(1990.2)가 트리폴리에서 개최되었다. 또한 장기적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한·사우디 항공운수소득 면세협정서명(1990.1), 한·가나 경제기술협력 및 무역진흥협정 서명(1990.6), 한·이란 체신협력의정서 서명(1990.8), 한·자이르 투자보장 협정 서명(1990.8)이 있었으며 사우디에서는 무역사절단(1990.5)을, 콩고에서는 우리나라와의 통상증진을 위해 官·民 通商使節團을 파견(1990.10)하기도 하였다.

第2節 北方外交의 推進

1. 概 觀

가. 北方外交의 概念

북방외교는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궁극적인 통일여건 조성을 위하여 소련, 중국, 동구제국등 사회주의 국가와의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모색코자 하는 외교적 노력을 總體的으로 의미한다.

이러한 노력은 정부가 우리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공산국가에 대해 개방정책을 천명한 1973년의 6.23선언과 맥을 잇고 있으며, 제6공화국 정부가 1988년 7월 7일 「民族自存과 統一繁榮을 為한 大統領 特別宣言」으로 북한에 대한 우리의 전향적 정책과 적극적인 대사회주의국가 관계 개선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구체화되었다.

나. 北方外交의 目標

북방외교는 중·소를 비롯한 북방 사회주의제국과 정상적인 관계를 설정하고 이를 증진함으로써 한반도의 현실에 대한 국제적 인정을 추구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이를 받아들이도록 함으로써, 한반도 정세안정과 평화정착, 그리고 더 나아가 평화적 통일을 이루하는데 주안점이 있다.

동시에 우리 우방이 北韓과의 關係改善을 도모케 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고립상태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도록 유도하는데도 그 목표가 있다.

아울러 사회주의국과의 관계발전으로 종래 서방국가만을 대상으로 하였던 우리외교의 영역을 확대하여 全方位外交로 전환하는 일도 북방외교가 추구하는 바이다.

또한 중·소등 사회주의 제국과의 통상·경제 교류 확대를 통하여 호혜적인

관계수립을 기하고 경제적 실익 증대 기회를 도모하는 점도 빼 놓을 수 없을 것이다.

다. 그간의 成果

제6공화국 정부 출범 이래 가속화된 北方外交는 88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하였다.

우선 1989년 2월 헝가리와의 수교를 그 첫번째 성과로 꼽을 수 있으며, 이후 폴란드, 유고와는 1989년 11월 및 12월에 각각 수교하였으며 1990년 3월에는 체코, 불가리아, 루마니아와도 수교하였고, 1991년 8월에는 알바니아와 수교함으로써 동구의 모든 국가를 망라한 外交網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아시아지역의 몽골과도 1990년 3월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소련과는 1990년 6월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에서 사실상 수교원칙에 합의하고 동년 9월 뉴욕 양국 외무장관 회담에서 수교에 최종 합의함으로써 북방외교는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1990년 12월 노태우 대통령은 소련을 공식방문하여, 양국간 善隣協力關係의 발전을 위한 굳건한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채택한 모스크바 선언은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章典이 되었다. 1991년 4월 소련 최고 지도자로는 최초로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방한, 제3차 한·소 정상회담을 가짐으로써 한·소간 실질협력시대의 본격적인 도래를内外에 과시하였다.

중국과는 1990년 10월 대한무역진흥공사와 중국 국제상회간에 양국간 비자발급 업무등 일부 영사업무를 수행하는 貿易代表部를 상호 개설키로 합의하고 이에따라 1991년 1월과 4월에 무역대표부가 북경과 서울에 각각 개설된 바 있으며, 양국간 교류도 계속 활발함을 보여 1989년 23,000명 수준이었던 양국간 인적교류가 1990년에는 57,000명을 상회하고 교역도 1989년의 31억불에서 38억불로 증가되는등 꾸준하고도 점진적인 발전의 양상을 보여왔다.

또하나의 북방외교의 성과로서는 1991년 남북한의 유엔가입이다. 우리의

유엔가입에 대한 유엔상임이사국인 소련의 지지가 분명하여지고 국제적 콘센서스가 확실시됨에 따라 결국 1991년 5월 북한은 그간의 반대입장에서 돌연 유엔加入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바, 이는 우리정부가 꾸준히 추진해온 북방외교의 성과로서 이를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성원이 되도록 유도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 向後 北方外交 推進方向

앞으로의 북방외교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소련·동구등과의 실질협력관계의 내실화를 기하면서 이제 마지막 주요대상으로 남아있는 중국과의 관계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나갈 것이다.

중국과는 양국간 호혜적인 경제교류를 더욱 증대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미 개설된 대표부를 양국간 주된 相互 接觸窗口로서 양국간 공적접촉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한·소 수교, 남북한의 유엔가입, 일·북한 수교교섭등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활용, 韓·中 關係正常화의 촉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북방외교를 추진하여 나감에 있어 미·일등 전통적 우방과의 긴밀한 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우방국가와의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국민적 지지와 이해를 바탕으로 북방외교가 추진될 수 있도록 북방외교 정책을 널리 알리고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도 계속 경주하여 나갈 것이다.

2. 韓·中關係

가. 兩國間 實質協力 關係의 增大

1990년도에는 중국내 보수파 정치세력의 드세 및 북한의 전통적인 대중국 우호관계의 영향 등으로 인하여 한·중간 정치관계의 발전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한데 비해 經濟交流, 人的交流를 비롯한 양국간 실질협력 관계는

꾸준한 증대추세를 보여 주었다.

먼저 한·중간 교역은 1989년 천안문 사태의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리라던 당초의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상당한 진전양상을 나타냈다.

〈韓·中 貿易 動向〉

(단위 : 백만불)

구 분	1986	1987	1988	1989	1990
수 출	668	813	1,700	1,440	1,553
수 입	621	866	1,387	1,700	2,268
계	1,289	1,679	3,087	3,140	3,820
수지	+47	-53	+313	-260	-715

*주요수출품 : 전자, 전기제품, 화학제품, 섬유, 철강제품

*주요수입품 : 섬유, 농수산물, 광산물

그러나 중국의 긴축정책 시행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입은 50%가량 증가한 반면 수출은 미미한 증가에 그쳤다.

한편 교역의 형식면에 있어서도 총교역액중 직접 교역액의 점유비율이 전년도인 1989년의 37.1%에서 약 52.6%로 증가되어 홍콩을 경유하지 않은 양국간直接交易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對中投資面에 있어서는 1990년 말까지 이미 투자된 40건 35백만불을 포함하여 총66개 업체 81백만불 상당의 투자가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 중국에 이미 進出 또는 진출준비를 갖추는 등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투자규모의 다양화, 투자지역의 광역화 경향을 보여주었다.

양국간 인적교류의 측면에 있어서는 1990년 한해동안 총 57,149명이 상호 방문하여 1989년의 23,000여명에 비하여 2배 이상에 달하였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과거의 친척방문主流의 경향에서 탈피, 상용목적의 방증은 물론, 교원 및 학생연수 등으로 다변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韓·中 人的交流 動向〉

(단위: 명)

구분	1986	1987	1988	1989	1990
訪中	427	785	5,750	13,620	31,934
訪韓	1,426	953	3,610	9,340	25,215
계	1,853	1,738	9,360	22,960	57,149

이외에 1990년 북경아주대회중의 서울-북경간 직항 전세기 운항과 1989년 8월-1990년 11월에 걸쳐 서울-상해간을 22회 운항한 부정기 전세기 운항 등의 실적을 거둔 항공협력과 부산-대련, 부산-상해 및 인천-천진간 화물선 및 인천-산동성간 여객선이 정기운항하게 된 해운협력을 비롯 기타 어업협력, 금융협력 및 民間經濟人 교류 등의 차원에서 꾸준히 발전추세를 보이고 있는 등 양국간 실질관계는 계속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나. 貿易代表部의 設置合意와 韓·中 政治關係 發展

양국간에 인적·물적 교류면에 있어서 지속적인 증대를 보이게 되자 양국은 이러한 제반교류를 촉진하고 교류과정에서의 여러가지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식적 연락창구 설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무역사무소의 설치문제는 1989년 이전에도 省次元에서 논의가 있어 왔으나 1989년 이후에는 이러한 省次元의 사무소 교환설치 논의가 중앙차원으로 격상되었다.

1989년 1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의 우리 KOTRA에 대한 중앙차원의 사무소 설치 교섭제의 이후, 그간의 교섭과정을 거쳐 1990년 10월20일에 우리측에서는 KOTRA 이선기 사장이, 중국측에서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CCPIT) 정홍업 회장이 중국국제상회(CCOIC) 회장 명의의 무역대표부 교환 설치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동 합의서의 내용중 중요한 것으로는, 동 무역대표부가 양국간 경제무역 관계발전, 투자 및 과학·기술교류 촉진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접수국 유관 부서와의 연락, 교섭을 담당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비자발급 업무를 수행키로 한 것 외에, 각 대표부 직원수를 20명이내로 하고 추후 협의를 통해 증원이 가능토록 하며, 대표부직원 및 가족에 대한 안전보장 및 제반편의를 제공키로 한 것 등을 들수 있는 바 이에따라 우리나라 1990년말 대표부 창설요원을 북경에 파견하였다.

3. 韓·蘇關係

가. 概觀

한·소 관계는 1989년에 領事處 상호 설치 합의로 공식관계 수립을 향한 진전을 이룩한 이후, 1990년도에 들어서 빠른 관계개선을 보였다.

1990년 3월 정부 여당의 당·정 대표단이 방소하여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비롯한 소련 고위층과 대화를 함으로써 관계발전에 기여하였으며, 1990년 6월 역사적인 센프란시스코 정상회담은 한·소 관계 정상화와 東北亞에서 平和 및 和解의 새시대 도래를 예고하였다. 결국 이러한 상황진전의 결과, 1990년 9월 한·소 외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관계정상화를 이룩하게 된다.

국교수립이후 한·소 양국은 관계심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였다. 그 결과 1990년 12월과 1991년 4월에 양국 정상이 交換訪問을 실현하여 2차례의 정상회담을 갖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제반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내실있게 추구해나갈 기반을 확고히 하였다.

그리고 1991년 1월에는 한·소 외무부간 第1次 政策協議會가 외무차관간에 열려 양국의 외교정책 전반에 걸쳐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외교분야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한편 1990년 8월과 1991년 1월에 걸쳐 2차례에 걸쳐 열린 경제 각료회담은 경제협력, 합작투자등의 사업을 종합 검토하여 실질분야에서도 호혜적인 협력분야 개발을 지향하였다.

한·소 양국이 이처럼 단기간에 관계 발전을 이룩하게 된 것은 한국의 제6공화국 정부가 북방외교를 적극 전개하고, 소련 또한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제시한 新思考에 입각한 새로운 아·태 정책에 의거, 이에 호응한 결과이며, 양국 정부 정책에 따라 각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된 제반교류와 접촉의 덕택이기도 한데, 이제 한·소 양국은 명실공히 隣接國으로서 선린·협력관계로 진입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分野別 關係現況

(1) 政治分野

(基本立場)

한·소간 정치분야 관계진전에 있어 그간 우리는 인접국이자 한반도의 평화·안정 및 궁극적인 통일에 주요한 역할을 할 소련과 오랜기간 外交의 인단절을 겪어왔음을 주목하고, 소련에 개혁지향적이고 전향적인 대외관계 시각을 가진 지도부가 존재할 때 신속히 관계를 정상적인 궤도에 옮려놓아야겠다는 입장으로 대처하여 왔다.

그리고 소련과 제반협의를 해나감에 있어서,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는 문제라든가, 북한으로 하여금 현실적이고 개방적인 정책을 취하도록 유도하는 문제, 우리의 外交地平을 확대하는 문제, 한·소 양자간 호혜적인 실질협력분야를 개방하는 문제등에 있어서 소련측과 적극 협조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왔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북한의 대남 도발 가능성 억지, 소·북한 군사협력에 대한 견제, 남북 대화 진전, 북한의 대남군사정책변화, 북한의 핵안전조치협정

체결, 유엔가입문제, 양자간 협력강화등에 집중되었다.

또한 우리는 이 과정에서 우리의 대소 외교가 기존 우방과의 확고한 관계를 근간으로 시행되며, 기존 우방과의 긴밀한 협의와 지원을 바탕으로 소련과 교섭함을 분명히 하여왔다.

(1990년 12월 모스크바 頂上會談)

이러한 기본입장에 따라 우리는 1990년 12월 노태우 대통령의 소련 방문을 추진하였으며, 당연히 한반도 평화정착과 한·소 양자간 호혜적 협력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에 주안점을 두고 정상회담에 임하였다.

정상회담시 논의된 내용을 일별해보면, 한반도 평화정착문제와 관련, 소측은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기여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으며, 한·소 관계가 남·북한 관계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남·북한간의 대화와 교류를 통한 信賴構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우리 견해에 공감하였다.

양자간 협력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고위급간의 대화를 빈번히 하고 경제, 사회, 문화등 여러분야에서의 협력 잠재력을 개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결과 양측은 상호 공감하는 부분을 문서화하였는데, “모스크바 宣言”과 무역협정,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과학기술협력협정등 경제관련 4개 협정 체결이 그것이다. 특히 “모스크바 宣言”은 한·소 양국관계가 지향하여야 할 章典과 같은 것으로서 관계의 법적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1990년 12월 한·소 정상회담의 성과를 평가한다면, 한반도의 안정을 더욱 공고히 하고, 동북아에 화해의 기운을 확산시키며, 한·소 양자간 관계가 지향할 방향을 설정함으로서 관계발전의 기초를 닦은데 있다고 할 것이다.

(1991年 4月 濟洲島 頂上會談)

1991월 4월 고르바초프 대통령 방한은 1990년 12월 노태우 대통령 방소시 초청에 따른 것이나, 소련 국가원수의 최초 한반도 방문이라는 점에서 소련의

현실적인 대한반도 정책을 확고히 하고, 한·소 관계를 심화하는데 크게 기여한 계기가 되었다.

정상회담시 주요 토의사항은 한반도문제, 유엔가입, 북한의 핵안전 조치협정, 양자간 협력증진, 아·태 안보협력, 아·태 지역 다자간 경제협력 등이었는데, 먼저 한반도문제와 관련하여 남·북대화의 재개와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소련의 건설적 기여와 지원 필요성에 의견이 일치되었다.

둘째로 우리의 유엔가입에 대한 소련의 支持立場이 보다 구체적으로 표명되었다.

셋째로 북한이 IAEA 핵안전조치협정을 조속 체결토록 한·소 양국이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넷째, 양자관계에 있어서는 향후 경제분야등 실질협력 심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고 交易量을 지속적으로 늘려 금년도에 15억불, 1990년대 중반에 100억불 수준이 되도록 노력해 가기로 하였다. 기타 자원개발, 과학기술, 어업등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다섯째, 아·태 안보협력구상에 대하여 소련측은 고르바초프 방일시 제의한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하였으며, 우리는 아·태지역 안보협력의 관건인 한반도문제 해결등 여건조성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여섯째,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양국관계의 보다 역동적인 발전을 위하여 1990년 12월 노대통령의 방소시 서명된 「모스크바 선언」을 제도화할 것을 제의하고 이를 위하여 善隣·協力條約 締結을 제안하였다. 양측은 이 문제를 양국 외무장관간에 협의토록 하기로 합의하였다.

제주도 한·소 정상회담 결과, 한반도의 정세가 더욱 안정되고, 남·북대화, IAEA등 문제에 있어 북한의 현실적인 정책 전환이 불가피해지리라는 기대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유엔가입문제와 관련하여, 소련이 보다 분명한 입장을 취함으로서

중국의 태도 결정에 영향을 주고 결과적으로 북한이 유엔가입으로 선회하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2) 經濟分野

(基本立場)

우리는 한·소 양국이 지리적 인접성이나, 산업구조, 자원분포등 측면에서 經濟的 相互 補完性이 다대하다고 보고, 무역, 합작투자, 자원개발, 과학기술 교류, 교통·통신, 수산등 제반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적극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經濟交流現況)

경제분야 교류는 급격히 신장하고 있는 교역과 활발한 합작투자 논의, 해운·항공등의 교통편 확장 등으로 특징지워지는데, 특히 交易額은 1989년의 6억불에서 1990년에는 9억불에 육박할 정도로 증대되었고, 현재에도 계속 밝은 전망을 보이고 있다.

상세한 분야별 교류는 별첨하는 교류현황표와 같다.

(韓·蘇 經濟協力問題)

한·소간의 호혜적인 경제협력을 위한 구체적 방안은 수교교섭 전후부터 실무진간에 논의되어 왔으며, 1989년 8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1차 한·소 경제각료회담에서부터 본격 논의되었다. 이 결과 1990년 12월 노태우 대통령의 방소시에 한·소 양측은 앞서 언급한 무역협정등 4개 경제관계협정을 서명하여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후 1991년 1월 개최된 제2차 한·소 경제각료회담에서 양측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의 성공이 국제평화뿐 아니라 동북아 평화에도 긴요하다는 판단하에 소련의 經濟難 打開를 지원하고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대소 경제진출의 발판으로 활용한다는 입장에서 1991년-1993년중 총 30억불의 차관을 소련측에 제공키로 합의하였다.

이는 20억불의 우리 소비재와 자본재 매입용 차관과 10억불의 은행 차관으로

구성되었으며, 국제금리를 적용하는 상업성의 차관이다. 이 결과 1991년에는 소련이 급히 필요로 하는 8억불에 달하는 국산 소비재를 이 차관으로 수입하기로 하였다.

(3) 社會·文化·其他

(基本立場)

우리는 한·소 양국간의 장기적인 善隣·協力關係가 양국민간 이해와 신뢰의 축적에 바탕하여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에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이 기여하는 바를 중시하여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交流現況)

사회·문화분야 교류는 수교이전부터 활발하였으며 관계정상화를 앞당기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특히 학술·언론분야의 전향적 思考를 가진 양국 인사들이 현실적인 대외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양국 국민들이 “새로운 사고”에 쉽게 접근하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양국민간의 활발한 교류결과, 인적교류는 1989년도에 4,000여명에 달하였으며, 1990년도에는 12,000명을 상회하였다. 구체적인 교류내용은 별첨하는 교류현황표와 같다.

다. 向後 展望

앞으로 한·소 양국은 양자 차원의 협력을 차분히 발전시켜 호혜적 관계를 강화해 나가게 될 것인바, 이러한 상황전개는 북한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대내외정책을 취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이는 동북아 전반에도 화해의 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으로서는 일시적으로 이러한 상황 진전에 거부감을 가질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주변의 和解·協力秩序에 적응하여, 우리와의 대화와 교류에 보다 성의있는 자세를 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이는 중국의 對韓國 태도 변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향후 한·소 관계발전은 한반도 주변정세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으로서는 향후 한·소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되, 한반도 주변의 평화구도를 공고히 하는 노력을 계속하고자 하며, 북한에 대해서도 전향적 姿勢를 취하여, 한·소 관계개선 성과가 분단상황 극복에 이어지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반도 주변세력 균형이 급격히 변화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이며, 우방과의 긴밀한 협의하에 소련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첨 부 : 한·소간 분야별 교류현황

韓·蘇間 分野別 交流現況

분 야	내 용			
인적교류	○ 인적교류 현황 (단위 : 명)			
	구 분	1988년	1989년	1990년
	아국인 방소	356	1,940	7,014
	소련인 방한	1,879	1,995	5,322
	계	2,235	3,935	12,336
	○ 주요인사 교류현황 (90.1~91.5) - Logunov 모스크바대 총장 방한 (90.2) - 김영삼 민자당 최고위원 및 박철언 정무장관 방소 (90.3) - Aganbegyan 대통령 경제고문 방한 (90.5) - Dobrynin 대통령 외교고문 방한 (90.5) - 김종인 대통령 경제수석 방소 (90.8) - 이우재 체신부장관 방소 (90.8) - Sukharev 검찰총장 방한 (90.8) - Rusak 체육장관 방한 (90.9) - Kholesnikov 전자공업부장관 방한 (90.9) - Shimko 라디오부장관 방한 (90.11) - Medvedev 대통령위원회 위원 방한 (90.11) - Nazarbaev 카자흐공화국 대통령 방한 (90.11) - Djumagulov 키르기즈공화국 총리 방한 (90.11) - 노태우 대통령 소련공식방문 (90.12) - Rogachev 대통령특사(외무차관) 방한 (91.1) - Maslyukov 부총리 방한 (91.1) - Kudriavtsev 체신부장관 방한 (91.3) - Sobchak 상트 페테르부르크시장 방한 (91.3) - Gorbachev 대통령 방한 (91.4) - 정영의 재무장관 방소 (91.4) - Anfimov 전기기계성장관 방한 (91.4) - 박준규 국회의장 방소 (91.5) - Panyukov 민항장관 방한 (91.5)			

분 야	내 용																
정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사처 설치 합의(89.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 대한민국 영사처 개설(90.2) - 주한 소련 영사처 개설(90.3) ○ 당·정 대표단 방소(9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영삼 민자당 대표위원 및 박철언 정무장관등 - 고르바초프 대통령 예방등 주요인사 접촉 ○ 샌프란시스코 한·소 정상회담(9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교 원칙 합의 ○ 제1차 정부대표단 회담(9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종인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등 방소 ○ 한·소 외무장관 회담 및 한·소수교(90.9) ○ 메드베데프 대통령 위원회 위원 방한(90.11) ○ 노태우 대통령 소련 공식방문(9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스크바 선언 채택 ○ 로가초프 소련 특사(외무차관) 방한(9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정책협의회 개최 ○ 제2차 정부대표단 회담(9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슬류코프 부수상등 방한, 경제협력방안 타결 ○ 한·소 외무부간 고위협의(9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가초프 외무차관 ESCAP 총회 참석 계기 ○ 한·소 제주도 정상회담(9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정세, 유엔가입등 양국 협력 증진 																
통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역현황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억불)</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 분</th> <th>1988년</th> <th>1989년</th> <th>1990년</th> </tr> </thead> <tbody> <tr> <td>대소 수출</td> <td>0.2</td> <td>2.1</td> <td>5.2</td> </tr> <tr> <td>대소 수입</td> <td>1.8</td> <td>3.9</td> <td>3.7</td> </tr> <tr> <td>합 계</td> <td>2.0</td> <td>6.0</td> <td>8.9</td> </tr> </tbody> </table> ○ 주요 수출품 : 섬유류, 선박, 철강, 전자, 기타 소비재 ○ 주요 수입품 : 철강, 수산물, 비철금속, 목재, 화학제품 	구 분	1988년	1989년	1990년	대소 수출	0.2	2.1	5.2	대소 수입	1.8	3.9	3.7	합 계	2.0	6.0	8.9
구 분	1988년	1989년	1990년														
대소 수출	0.2	2.1	5.2														
대소 수입	1.8	3.9	3.7														
합 계	2.0	6.0	8.9														

분야	내용																																								
합작투자	○ 투자현황 (단위 : 만불)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투자자 (투자비율%)</th><th>현지법인명</th><th>투자업종</th><th>허가금액</th><th>투자금액</th></tr> </thead> <tbody> <tr> <td>현지법인</td><td>진도(10) 진도(50) 현대(50)</td><td>INTERLIK JINDO RUS SVETLAYA</td><td>무역업 무역업 원목 및 관련제품 제조</td><td>8 40 806</td><td>8 40 100</td></tr> <tr> <td></td><td>홍중물산(51) 이기(50)</td><td>HONG JOONG KHABAROVSK ANAM Co. LTD</td><td>소프트 웨어 개발 위생자 제조</td><td>42 30</td><td>— —</td></tr> <tr> <td></td><td>남성조선(50)</td><td>KORNAM</td><td>선박수리</td><td>24</td><td>—</td></tr> <tr> <td>현지법인 자회사</td><td>삼성물산 영국법인(51) (삼성물산 100%)</td><td>SAMSUNG GLAVSPORTS WAB</td><td>숙박업</td><td>240</td><td>—</td></tr> <tr> <td></td><td>계</td><td></td><td></td><td>1,190</td><td>148</td></tr> </tbody> </table>					구분	투자자 (투자비율%)	현지법인명	투자업종	허가금액	투자금액	현지법인	진도(10) 진도(50) 현대(50)	INTERLIK JINDO RUS SVETLAYA	무역업 무역업 원목 및 관련제품 제조	8 40 806	8 40 100		홍중물산(51) 이기(50)	HONG JOONG KHABAROVSK ANAM Co. LTD	소프트 웨어 개발 위생자 제조	42 30	— —		남성조선(50)	KORNAM	선박수리	24	—	현지법인 자회사	삼성물산 영국법인(51) (삼성물산 100%)	SAMSUNG GLAVSPORTS WAB	숙박업	240	—		계			1,190	148
구분	투자자 (투자비율%)	현지법인명	투자업종	허가금액	투자금액																																				
현지법인	진도(10) 진도(50) 현대(50)	INTERLIK JINDO RUS SVETLAYA	무역업 무역업 원목 및 관련제품 제조	8 40 806	8 40 100																																				
	홍중물산(51) 이기(50)	HONG JOONG KHABAROVSK ANAM Co. LTD	소프트 웨어 개발 위생자 제조	42 30	— —																																				
	남성조선(50)	KORNAM	선박수리	24	—																																				
현지법인 자회사	삼성물산 영국법인(51) (삼성물산 100%)	SAMSUNG GLAVSPORTS WAB	숙박업	240	—																																				
	계			1,190	148																																				
항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항공-Aeroflot사간 商務協定 체결(9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국정부의 공한 교환으로 발효 — 서울-모스크바간 직항노선 개설(90.3) ○ 한·소 항공회담(90.9 모스크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 취항권 허용등 항공협정 본문 문안합의 — 항공사 지정, 노선구조, 운항회수등 미합의 ○ 한·소 항공회담(91.3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미합의사항 등에 최종 합의 — 운항횟수 및 소련 영공 통과횟수 확대 ○ 91.5 항공협정 체결 																																								
수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국 수산업체 소련 해역내 선상원어 수매 및 가공사업 실시(89.2-90.1) ○ 어업협정 가서명(9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정부대표단 회담시 소련 수역내 직접 어로, 수산물 가공 및 양식등 합작사업과 어선 건조 수리사업 적극 지원등 수산분야 협력사업 추진키 위한 한·소 어업 공동위 설치 규정 ○ 어업협정 서명(91.9.16) 																																								

분 야	내 용
해 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한·소 해운협의(88.12,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국 선박의 상대국 항만입항 허용 ○ 제2차 한·소 해운협의(89.3, 모스크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 나호드카, 보스토치니간 정기 직항로 개설 ○ 제3차 한·소 해운협의(90.7,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 직항로 조기개설 및 운항초기 제3국적선 배제합의 - 양국내 해운대리점 설치 허용 ○ 제4차 한·소 해운협의(91.2, 모스크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국간 정기 항로 참여문제 및 항비차별 철폐에 의견 접근 ○ 양국간 수송량 급증등 고려, 직항노선 조기 개설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선사간 협의 진행중
문화 및 학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쇼이발레, 모스크바필, 레닌그라드필등 소련의 대표적 문화 예술단 방한 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8 3회, '89 9회, '90 11회 ○ 창무회, 리틀엔젤스 예술단등 방소 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9 1회, '90 10회 ○ 학술교류 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련 과학원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 미·캐나다연구소, 동양학연구소, 극동연구소 등의 국내 연세대, 한양대, 경남대, 한국국제관계연구소 등과 교류 - 모스크바 국립대, 레닌그라드 항공대, 블라디보스톡 대학 등이 연세대, 한국항공대, 경남대등과 교류 협정체결
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민족 체육대회 재소동포 참가(89.9) ○ 김집 체육부장관 소련방문(89.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0년도 체육교류계획 및 향후 한·소 정기전등 개최동 합의 ○ Rusak 체육위 위원장 방한시 체육교류협정체결(90.10)

분 야	내 용
상주기관 및 주재지사 상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TRA-소 연방상의 사무소 교환 설치 ○ 주소 우리나라 상사 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 삼성, 대우, 럭키금성, 선경, 코오롱, 쌍용, 진도 대한항공 모스크바 지사 설치 - 수출입은행, 조홍은행, 한국관광공사 사무소 설치 - 효성, 삼양사, 태평양화학등 지사 설치 추진중 ○ 주한 소련 상주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련항공사, 공업소유권 수출입공단, 공작기계류 수출입 공단 서울지사 설치 - 노보스티·타스등 언론기관, 해운, 관광 사무소 설치 추진중

4. 韓·東歐圈 關係

가. 概 觀

정부는 제6공화국 출범과 함께 고양된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와 경제성장의 성과를 바탕으로 북방외교를 주요 외교목표로 설정하고, 중·동구·제국과의 관계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왔다. 이러한 북방외교의 추진결과 헝가리(1989. 2. 1), 폴란드(1989. 11. 1), 유고(1989. 12. 27), 체코(1990. 3. 22), 불가리아(1990. 3. 23) 루마니아(1990. 3. 30) 및 알바니아(1991. 8. 22)와 외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中·東歐圈 7개국과 국교 수립을 달성하고 정상외교, 고위인사 교류 및 정부간 협정 체결을 통해 이를 국가와의 기본관계를 강화하면서 경제·통상·문화등 제반분야에서의 실질 협력관계를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다.

동구 각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제2차 세계대전후 동서냉전의 와중에서 이데올

로기의 희생물이 되어 왔다는 공통성을 지니고 있으며, 과거 40여년 이상 북한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졌던 국가들인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와 동구국가들과의 관계심화는 북한의 개방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 헝가리와의 關係 增進

1989년 2월 외교관계 수립이래 제반분야의 교류확대와 1989년 3월 최호중 외무장관의 헝가리 방문과 1989년 11월 노태우 대통령의 헝가리 방문이후 증진된 양국관계는 여타 중·동구국가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가장 모범적으로 심화 발전되고 있다.



한·헝가리 정상회담후 기자회견을 갖는
노태우 대통령과 곤츠 대통령(1990. 11. 서울)

양국간에 투자보장협정(1988. 12), 무역 및 경제협력협정(1989. 2), 문화협정(1989. 2), 외교관 및 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1989. 2), 과학기술협력협정

(1989. 3), 이중과세방지협정(1989. 3), 항공협정(1989. 11) 및 일반사증면제 협정(1991. 3)을 체결하였으며 양국간 경제공동위와 정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關係深化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확고히 마련하였다.

1990년 양국간의 교역량도 전년에 비해 2배 증가하는 등 통상 및 경제협력이 계속 강화되고 있으며 양국 국영방송사간 협력합의서 서명, 한국 국제문화협회와 평가리 문화교류회간 문화교류합의서 서명, 대학간 교류등을 통해 문화·언론·학술 방면에서도 상호 협력관계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특히, 1990년 11월 콘츠 평가리 대통령의 공식 방한은 1년전 노태우 대통령의 평가리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서 한·평가리 양국간의 실질협력관계를 강화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다. 폴란드와의 關係 增進

1989년 11월 외교관계 수립이후, 한·폴란드 양국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반분야에서 꾸준한 관계증진이 이루어져 왔다. 수교시 양국은 투자보장협정, 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 經濟關係 強化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아울러 이중과세방지협정과 항공협정도 1990년 2월 및 5월 각각 가서명되었다. 또한 주폴란드 한국 대사관과 주한 폴란드 대사관이 1989년 11월 27일 및 1990년 1월 16일 각각 개설됨으로서 관계증진활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한편, 1990년도의 양국간 교역량이 2억 달러를 상회함으로써 1989년 대비 176% 급신장 되었다. 양국은 문화교류분야에도 큰 진전을 이루었는바 1989년 크라코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내한 연주, 1990년 1월 카토비체에서의 백건우씨 피아노 연주회, 4월 바르샤바 대학에서 동구 최초로 구주한국학회의 개최 및 서울포럼의 현지 학술세미나 개최등 언론인, 학자들에 의한 활발한 문화·학술 교류가 있었다.

라. 유고와의 關係 增進

1989년 12월 한·유고간 대사급 외교관계가 수립된데 이어 1990년 2월 주유고 한국대사관이 개설되었고 1990년 3월에는 주한 유고대사관도 개설됨으로써 양국간 기본관계가 구축되었다.

1990년 양국간 교역량도 전년도에 비해 약 4배나 증가하는 괄목할만한 성장이 있었다.

1990년 3월 최호중 외무부장관이 유고를 공식 방문, 론차르 외무장관과 양국간 외무장관 회담을 가졌으며, 1990년 11월에는 요비치 유고 대통령이 공식 방한하여 노태우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으며 同機會에 양국 외상회담도 개최, 양국간 관계증진 방안에 관해 협의하는 한편, 양국 정부간 최초의 협정인 항공협정(1990. 11)을 정식 체결했다. 요비치 대통령의 방한은 한·유고 양국간 실질협력 관계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유고가 비동맹운동의 議長國임에 비추어 앞으로 국제무대에서의 양국간 협력관계가 더욱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 체코와의 關係 增進

헝가리, 폴란드, 유고와의 수교와 노태우 대통령의 헝가리 방문은 우리의 북방외교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산시켰으며, 동시에 체코는 1989년 11월이후 급속한 民主化 改革을 추진하면서 실리 외교를 추구함에 따라 한국과의 관계개선에 전향적 태도를 보여 왔다.

1990년 1월 체코 외무부의 요청에 따라 홍순영 외무부 대사를 단장으로 하는 정부대표단이 체코를 방문, 체코측과 수교문제를 협의하고 수교의정서에 가서명하였으며, 1990년 3월 22일 최호중 외무부장관이 체코를 공식 방문, 양국간 修交議定書에 서명함으로써 한·체코 양국은 동일자로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딘스트비어 체코 부총리겸 외무장관은 1990년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방한, 양국간 정무협력 관계를 강화시키고 아울러 무역·경제협력협정 및 항공협정을 체결(1990. 10. 26)함으로써 상호 보완적인 경제협력 관계 강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바. 불가리아와의 關係 增進

한국의 국력 신장에 따라 불가리아는 한국과의 경제협력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는 바, 1990년 2월 홍순영 외무부 대사는 불가리아를 방문, 불가리아 정부와 수교문제를 협의하였으며, 이어 최호중 외무부장관이 불가리아를 공식 방문, 1990년 3월 23일 보이코 디미트로프 불가리아 외무장관과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함으로써 한·불가리아 양국은 동일자로大使級 外交關係를 수립하였다.

또한 양국 외무장관은 동일자로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에 서명함으로써 경제과학기술분야에서 실질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양국간常駐大使館도 1990년 6월 13일 및 9월 10일 소피아 및 서울에 각각 설치됨으로써 양국 관계는 보다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사. 루마니아와의 關係 增進

1989년 12월 차우세스쿠 獨裁政權이 붕괴되고 루마니아 구국전선의 신정부가 수립됨에 따라 루마니아와의 관계수립도 급진진 되었던 바, 1990년 3월 30일 미트란 루마니아 외무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루마니아 정부사절단이 방한, 최호중 외무부장관과 수교의정서에 서명함으로써 한·루마니아 양국은同日字로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이후 한·루마니아 양국은 상주대사관 교환 설치(주루마니아 우리나라 대사관: 1990. 6. 13, 주한 루마니아 대사관: 1990. 7. 19) 및 주요인사 방문 교류, 통상 및 경제협력 강화, 문화·체육교류 증진 등을 통하여 양국간 실질협력 관계를 강화시켜 왔다.

특히, 1990년 8월 6일부터 8일까지 최호중 외무부장관은 루마니아를 공식방문하여 무역협정,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第3節 平和統一 基盤 造成

1. 統一環境 好轉

1990년은 남북관계와 우리의 통일환경 개선에 중요한 전기가 되었던 해라고 할 수 있다.

9월에 이루어진 한·소수교는 우리의 北方外交의 주요한 성과로서 동북아정세에 변화를 초래함은 물론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평화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또한 전세계적인 탈냉전추세와 독일의 통일은 유일한 분단지역으로 남아있는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국내외의 기대를 고조시키는 한편, 교류협력을 통한 신뢰 회복과 유엔 동시가입등을 강조하는 우리의 統一 接近方式이 합리적임을 증명해 주었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는 제한적이나마 북한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하였다. 북한은 대외적인 고립 탈피와 내부 경제난 타개를 위해 일본을 비롯한 서방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이는 외형적이나마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분단 45년만에 처음으로 總理會談이 개최되고, 체육·문화·예술등 분야에서의 교류가 비교적 활발하였던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일련의 유연한 자세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기존 대내외 정책을 고수한 가운데 대남전복전략에 기초한 정치 선전 선동공세를 계속하였다.

제6공화국 정부는 1988년 7.7선언, 1989년 한民族共同體 統一方案 발표에 이어, 1990년에는 남북교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협력기금법을 제정하고, 「7.20 민족대교류 선언」을 발표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과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하였다.

2. 「7. 20 民族大交流 宣言」

가. 「7. 20 民族大交流 宣言」 發表

노태우 대통령은 세계적 대변혁의 조류가 냉전체제를 허물고 있고, 또 우리의 북방정책이 큰 실효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남북관계의 변화를 실현화할 단계에 와 있다고 판단, 제45주년 광복절을 앞둔 1990년 7월 20일 민족대교류 선언을 발표하였다.

同宣言은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7.7 선언이후 우리가 꾸준히 추진해 온 남북관계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서 남북한 상호개방과 교류를 통해 민족화합과 통합을 이루어 나가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었다.

또한 동 선언은 남북통일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인 동족간의 왕래와 교류를 실현시켜 상호 신뢰구축과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 발전시킴과 동시에 유구한 역사를 가진 문화민족으로서의 자존을 높여 나가겠다는 의지의 발로였다.

나. 同 宣言의 内容

「7.20 민족대교류 선언」은 광복 45주년이 되는 1990년 8월 15일을 전후한 5일간을 “民族大交流의 期間”으로 선포하고, 동 기간중 판문점 남측지역을 포함한 남한 전지역을 북한주민에게 개방하고 북한측도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여 판문점 북측지역뿐만 아니라 북한 전지역을 개방할 것을 요청하면서 아래와 같은 관련 조치를 밝혔다. 또한 동 교류가 성공적으로 실시될 경우 추석, 설날, 한식을 전후로 한 민속 명절때에도 계속 실시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 (1) 남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모든 북한주민들에게 차별없이 南韓訪問을 허용할 것이며, 또한 기한내에 안전한 北韓 歸還을 보장하겠음.
- (2) 방문지역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으며, 남한 어느곳이든 희망하는

지역을 가볼수 있고 희망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하겠음.

- (3) 방문자에게 가능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겠으며, 필요하다면 숙박시설 및 숙·식비용도 한국정부가 부담하겠음.
- (4) 남한주민이 판문점 북측지역을 포함한 북한 어느지역이라도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를 허용할 것인바, 북측도 판문점 북측지역뿐 아니라 전지역을 개방하고 북한방문을 원하는 남녀 동포들을 우리와 마찬가지로 제한없이 받아들이길 희망하며, 이들의 安全歸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기를 기대함.
- (5) 앞으로 외국인이 판문점을 통하여 북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것이며, 또한 판문점을 통하여 남한을 방문하는 경우도 이를 허용하겠음.

다. 同 宣言 後續 措置

북한측은 노태우 대통령의 「7.20 민족대교류 선언」에 대해 즉각적인 거부의사를 표명하면서, 콘크리트장벽 제거, 국가보안법 철폐, 불법입북자 석방, 판문점에서 개최되는 8.15. 범민족대회 개최 보장등 전제조건을 제기하였다.

우리측은 1990년 7월 23일 통일원, 법무, 국방 3부장관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7.20 민족대교류 선언」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後續措置를 발표했는 바, 이는 북한측이 내놓는 어떠한 제안이든 긍정적으로 수용하겠다는 大前提위에서 우선 만나서 의논하자는 적극적인 의사를 담고 있다.

- (1) 통일원 장관은 북한측이 8월 15일 판문점에서 개최하려는 소위 '범민족 대회'에 우리측 참가를 허용하며, '범민족대회' 참가자들이 백두산-판문점-한라산을 종단하는 祖國統一促進大行進을 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북한측이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접촉에 적극 응해줄 것을 촉구했다.
- (2) 법무부 장관은 우리의 국가보안법과 구속자 문제와 함께 북한의 안전관

계 형사법과 사상법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1990년 7월 27일 남북 법무당국자회담을 갖자고 제의했다.

- (3) 국방부 장관은 그동안 북한측이 주장해온 콘크리트장벽 共同調査를 혼례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히고, 북한측에 대해 우리도 북한지역을 조사 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하면서 1990년 7월 27일 이를 위한 실무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했다.

라. 海外反應

「7.20 민족대교류 선언」은 우리의 제반 적극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의 거부로 끝내 무산되었으나, 해외주요 언론은 이를 전향적인 조치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각국의 정부와 海外橋民들도 동 선언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주요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미 국 : 국무부 대변인은 노대통령이 제시한 민족교류가 남북한 화해와 단합을 위한 긍정적 조치이며, 북한의 무조건 호응을 희망하였다. 의회도 남북대화에 있어서 한국정부의 주도적 역할과 상황변경을 위한 능동적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Jim Leach 하원의원과 Solomon Ortiz 하원의원의 支持發言을 의회속기록에 포함시켰다.
- (2) 일본등 주요 우방국 : 「7.20 민족대교류 선언」을 아주 중요하고 획기적인 조치로 적극 환영하고, 북한이 호응해 올 것을 촉구하였다.
- (3) 교포사회 : 일본민단은 8.15 경축행사시 민족대교류 및 평화통일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홍보책자 2만부를 제작, 배포하였다. 미국등 여타지역 각 한인회도 지지성명을 발표하고 강연회등 홍보집회를 개최하였다.

3. 南北高位級 會談

가. 開催經緯 및 背景

북한측은 1988년 11월 7일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포괄적인 평화방안”을 제시하고, 동년 11월 16일에는 이근모 정무원 총리명의 서한을 통해 우리측에 「南北高位級 政治軍事會談」 개최를 제의하였다. 우리측은 이에 대응하여 1988년 12월 28일 강영훈 총리 명의의 서한을 통해 남북이 각각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7명의 대표를 구성, 남북간에 신뢰구축과 긴장완화 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의, 해결해 나가기 위한 「南北高位當局者會談」을 열것을 제의하고, 이와 관련된 절차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각기 5명의 대표로 예비회담을 가질 것을 제의하였다.

북한측이 1989년 1월 16일 「남북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의 태두리내에서 이를 수용함으로써 1989년 2월부터 예비회담이 개최되었으며, 1990년 7월 26일 개최된 제8차 예비회담에서 양측은 남북고위급회담 개최에 관한 합의서를 체택하였다. 이로써 분단 45년만에 최초로 남북총리회담이 1990년 9월부터 12월까지 서울과 평양에서 세차례 개최되게 되었다.

북한이 남북고위급회담에 응하게 된 것은 주한미군 철수등 정치·군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리 당국과의 대화에 응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1990년 6월 韓·蘇 頂上會談 開催 등 한소관계의 급진전과 이로 인한 동북아정세의 변화에 대처해 나가는데 있어 남북고위급회담이 유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북고위급회담의 개최는 무엇보다도 남북당국간의 대화통로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나. 開催內容

(1) 第1次 南北高位級會談(1990.9.4-7, 서울)

우리측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합의기반 마련을 위해 8개항의 「南北關係改善을 위한 基本合意書」를 제시하고,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교류협력

실시 문제를 병행 토의한다는 입장에서 10개항의 「다각적인 교류협력실시 방안」과 8개항의 「정치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반면 북한측은 회담에서 준수해야 할 「3個原則」과 방북 구속자 석방문제, 팀스피리트훈련 중지문제, 유엔가입 문제등 「3個 緊急問題」의 우선적인 해결을 주장하면서, 선 정치군사문제 해결, 후 교류협력추진 입장을 명백히 하였다.

쌍방은 이러한 상반된 입장의 차이로 인하여 의제토의에서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했으나, 북한측의 단일의석하 유엔가입 방안을 청취키 위한 실무대표 접촉을 개최하고 적십자회담 재개를 촉구한다는데 합의하였다.

이같은 합의에 따라 유엔문제 관련 남북실무대표 접촉이 판문점에서 세차례 개최되었으나, 쌍방의 견해차이를 좁히지 못하였다.



제 1 차 남북고위급회담(1990. 9. 서울)에 앞서
악수하는 남·북한 대표단

(2) 第2次 南北高位級會談(1990.10.16-19, 平양)

2차회담에서 우리측은 북한측이 1차회담시 제시한 「회담시 준수해야 할 3개 원칙」을 수용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 수정안과 통행, 통신, 경제교류협력에 관한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의제토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交流協力協議會」와 「政治軍事協議會」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7개항의 남북불가침에 관한 선언을 제안하면서 2차 회담에서 당장 합의·서명하자고 주장하고, 토의안건은 정치적 대결상태 해소방안,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방안, 다방면적 협력교류실현 방안으로 구분하되, 이를 일괄 합의, 동시 집행하자고 주장하였다.

우리측은 이러한 북측 주장을 또다시 대폭 수용, 쌍방이 합의할 수 있는 기본원칙적 사항을 포괄하여 「南北韓 和解와 協力を 위한 共同宣言」을 제시하였으나, 북측은 이를 거부하였다.

한편 쌍방은 3차회담시 합의서 채택을 위해 세차례에 걸쳐 실무대표접촉을 개최하였으나, 우리측은 선 기본합의서 채택, 후 불가침문제 협의 해결을 주장하고 북한측은 불가침문제를 우선 해결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성과를 보지 못하였다.

(3) 第3次 南北高位級會談(1990.12.11-14, 서울)

3차회담에서 우리측은 먼저 남북고위급회담이 離散家族問題 해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조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의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우리측은 불가침선언 문제와 관련 ① 실천의지 ② 상대방에 대한 적대정책 포기 ③ 확고한 보장장치 강구등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정치군사분과위에서 협의 해결할 불가침에 관한 우리측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북측은 불가침선언 채택 → 대미평화협정 체결 →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우리의 북방정책과 유엔가입 노력을 비난하였다.

또한 북측은 10개항으로 된 「南北韓 不可侵과 和解協力에 관한宣言」을 제시하고, 합의 서명할 것을 주장하면서 1,2차 회담시 제기한 3개 긴급문제를 또다시 거론하고 동 문제의 해결에 대한 우리측의 확답을 요구하였다.

다. 評 價

양측은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을 위해서는 상호불신의 해소가 긴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으나, 그 해소방법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입장차이를 노정하였다. 우리측은 사회개방과 교류협력을 우선시하는 점진적인 방법을 주장한데 반해, 북측은 상대방에 대한 정치·군사적인 위협 해소를 우선시 하는 즉각적인 방법을 주장하였다.

3차에 걸친 회담에서 양측은 상대방의 주장을 수용하는 안을 제시하는 등 합의서 도출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이러한 기본 시각차를 좁히지는 못하였다. 우리측은 북측의 불가침선언 제의가 주한미군 철수와 미·북한간 평화협정 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저의를 의심하였고, 북측은 우리측의 기본합의서를 동·서독간 합의서의 재판으로 인식, 獨逸式吸收統合에 대한 의구심을 표출하였다.

요컨대 1990년에 개최된 3차례의 남북고위급회담은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지는 못하였으나, 남북 쌍방간에 그러한 회담이 개최되었다는 사실자체와 금후 실질적인 성과도출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第4節 유엔 및 非同盟에 대한 外交

1. 유엔에 대한 外交

1975년 제30차 유엔총회를 마지막으로 한반도문제가 더 이상 유엔총회에 연례 상정되지 않게 된 이후 정부는 우리나라의 유엔가입을 조속히 실현시키는데 우리의 대유엔 외교의 목표를 두고 있으며, 그밖에 非會員國으로서 참여가 가능한 실질문제 토의 및 유엔산하기구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의 정당한 기여와 역할을 다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1973년 6.23 선언으로 북한이 우리와 함께 유엔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음을 천명한 후, 남북한의 유엔가입이 남북한간의 對話와 協力 기회를 증진시키며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평화통일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에서 남북한의 유엔가입을 촉구하여 왔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의 6.23 선언을 계기로 과거 우리가 유엔 단독가입을 추진하던 때 우리와 함께 유엔에 가입하기를 희망하였던 태도를 돌변시켰다. 즉, 그들은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은 한반도 분단을 영구화한다고 주장하면서 남북한의 단독 또는 동시 유엔가입을 반대하여 오다가 1990년 동·서독(10월), 남·북예멘(5월)의 통일로 분단국의 유엔가입이 분단을 고착화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되자 통일이전 가입시에는 單一國號로 단일의석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988년 제6공화국의 출범이후 제24차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지속적인 경제성장등에 따른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의 향상 및 특히 1988년 10월 18일 우리나라 國家元首로서는 최초인 노태우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등으로 우리나라의 유엔가입 당위성에 대한 세계여론의 지지는 그 어느때보다 높아졌다.

또한 유엔회원국 자격을 충분히 갖춘 우리나라의 유엔가입 문제가 북한의

유엔가입에 대한 부정적 태도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없다는 인식에서, 우리는 북한의 입장에 구애받지 않고 대다수 유엔회원국의 이해와 지지속에 유엔가입을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하고 있다.

1990년은 우리의 유엔가입 실현을 위한 外交活動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한 한해였다. 최호중 외무부장관은 제45차 유엔총회가 개막된후 9월 24일부터 10월 4일까지 뉴욕을 방문하여 대유엔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최호중 외무부장관은 9월 30일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과 회담하고 한·소 수교에 관한 공동 코뮤니케에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 외무장관 만찬시 전기침 중국 외무장관과 접촉하였고, 한·미, 한·일 외무장관 회담 및 케야르 유엔사무총장, 데 마르코 제45차 유엔총회의장, 그리고 20개국 외무장관과의 個別會談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유엔가입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들의 협조와 지지를 요청하였으며, 동 기회에 말리, 베냉 외무장관과는 수교합의서에 서명하였다.

또한 최호중 외무부장관은 9월 30일 71개국의 국가원수 또는 정부수반과 80여개국의 각료급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지도력 결집이라는 목표아래 개최된 세계아동 정상회의 (World Summit for Children)에 노태우 대통령의 개인대표 자격으로 참석하였고 아동권리협약에 서명하였다.

그밖에 최외무장관은 뉴욕체재중 유엔기자단과의 간담회, 뉴욕타임즈 유엔지 국장과의 인터뷰, 아시아협회 연설등을 통하여 유엔가입에 관한 우리의 정당한 입장을 설명함으로써 이 문제에 관한 국내외 언론매체의 폭넓은 관심을 유도함은 물론 미국내 여론지도층에 대한 우리나라 유엔가입 지지기반 확충에 적극 노력하였다.

제45차 유엔총회 基調演說(1990.9.24-10.10)에서는 우리나라의 유엔가입을 지지하는 내용의 발언이 크게 증가하였다. 1989년도 제44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에는 48개국이 우리입장을 명시적으로 지지한데 비하여, 제45차 총회에서는 71개국이 우리의 유엔가입을 지지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

이와 관련, 특히 주목할만한 것으로는 각지역, 각그룹국가(동구권, 비동맹권, 서방진영등) 별로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한 가운데 미국 부쉬대통령이 기조연설에서 우리 입장을 적극 지지 발언함으로써 유엔가입 추진에 있어 주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한편 제4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시 북한입장을 지지한 국가는 9개국에 불과하였고 이들 9개국들도 북한 통일정책에 대한 일반적 지지표명에 그쳤을 뿐 북측이 주장하는 “단일의석 유엔가입안”에 대하여 支持發言을 한 국가는 한나라도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전방위 외교의 추진과 함께 北方政策의 성공적 수행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유엔가입이 더이상 늦추어져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뚜렷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1990년 제45차 유엔총회와 관련한 우리의 외교활동중 특기할 만한 또 하나의 일은 유엔가입 문제에 관한 우리 입장의 安保理文書 배포이다. 우리 정부는 우리의 유엔가입을 적극 지지하는 국제적 분위기가 널리 확산되어 있음을 감안, 1990년 9월 27일에는 유엔가입 문제에 관한 우리의 기본입장(S/21827)을, 12월 24일에는 우리와 함께 유엔에 가입하도록 남북한 고위급회담 및 실무접촉에서 북한을 계속 설득하여 온 우리의 노력을 밝히고 남북한의 유엔가입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국제사회의 지속적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政府覺書(S/22024)를 각각 안보리문서로 유엔회원국에 배포하였다. 이와 관련 북한은 제45차 총회기간중 5월 29일(S/21315), 9월 18일(S/21787), 10월 2일(S/21836) 총 3차례에 걸쳐 우리의 유엔가입 노력을 비난하는 내용의 안보리문서를 배포하였다.

이밖에도 우리나라는 유엔총회 산하 각 위원회등 옵서버로서 참여가 가능한 유엔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理事國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엔아동기금(UNICEF) 집행이사회등 유엔산하기구 회의와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유엔내에서 우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외교노력을 계속하였다.

정부는 1991년에 화합과 협력의 국제분위기를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의 유엔가입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최대한의 외교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종전과 같이 여러분야의 유엔활동에 대한 우리의 참여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2. 非同盟에 대한 外交

가. 非同盟運動과 우리나라의 非同盟에 대한 外交

비동맹운동은 현재 101개국을 회원국으로 갖고 있으며, 유엔이외의 가장 큰 규모의 국제적인 정치적 모임이라고 할 수 있다. 비동맹운동은 회원국간의 유사한 정치, 경제적 배경을 바탕으로 기존 동서대결의 틈바구니에서 독자적인 활로와 영역을 구축하고자 노력해 왔다. 비동맹운동은 주요 國際問題에 대하여 공동 입장을 정립하여 단합된 영향력을 과시하는 한편, 경제적 낙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회원국간의 남남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비동맹은 1960년대 창설 초기에 반서방적 자세를 보여온 데다 1975년 북한의 가입 이후 한반도문제에 대하여 매우 편향된 입장을 취해 왔다. 따라서 그간 우리 정부는 비동맹의 한반도 상황에 대한 그릇된 시각을 바로 잡고, 비동맹에서 북한의 대남 비방과 정치선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많은 외교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1988년 7.7 특별선언을 통해 유엔·비동맹등 국제무대에서 남북한간에 불필요한 對決·競爭外交를 지양하는 원칙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는 비동맹권에서 남북한 대결차원에서가 아니라 제3세계 국가들과의 실질협력 관계를 증진시키는데 대비동맹 외교의 중점을 두고 있다.

나. 非同盟運動과 韓半島問題

비동맹운동에서 처음으로 한반도문제가 거론된 것은 1964년 이집트 카이로에서 개최된 제2차 비동맹 頂上會議였으며, 이 회의에서는 한반도 문제를 분단국 문제의 하나로 간접 거론하였다.

1970년 잠비아 루사카에서 개최된 제3차 비동맹 정상회의부터 매년 정상회의와 외상회의에서는 최종선언문에 한반도 조항을 직접 포함시켜 왔고, 다만 1981년 뉴델리 전체외상회의에서만 포함시키지 않았다.

1980년대 이후 비동맹운동의 주도권이 그간 친공산 강경파 국가들로부터 중도·온건파 국가들에게 넘어오면서 한반도문제는 북한의 집요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비동맹회의의 주요 의제로 취급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비동맹은 그간 매 회의마다 새로운 내용이 없는 韓半島 條項을 기계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바, 북한측은 기존의 한반도 조항을 그들에게 유리하게 수정시키려고 적지않은 노력을 전개하였으나 대다수 비동맹 회원국들로부터 외면당한 바 있다.

이와 관련, 1989년 9월 유고 베오그라드에서 개최된 제9차 비동맹 정상회의 시 의장국인 유고는 회의전에 배포한 最終文書의 초안에 한반도문제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물론 동 회의에서 한반도 조항이 다른 문제들과 함께 부활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과정은 한반도문제가 비동맹운동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며, 나아가 남북한 당사자간 직접 교섭과 대화를 통해 그 해결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비동맹권의 입장을 잘 보여주었다.

다. 最近 非同盟運動 動向

1989년 제9차 비동맹 정상회의 결정에 따라 1990년 6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풀에서 개최된 15개 개도국(G-15) 정상회담에서는 新國際經濟秩序의 형성에 따른 개도국간의 공동대처 노력의 필요성이 부각되었고, 비동맹국가들이 선진국 경제협의체인 G-7에 대한 대결 자세를 탈피하여 선진국과의 타협을 모색하는

가운데 개도국간의 南南協力 중진을 도모하는 방안이 모색됨으로써 비동맹권내의 현실주의적 경향을 제고시킨 바 있다.

그리고 최근 걸프사태와 관련 현 비동맹 의장국인 유고를 중심으로 평화적 해결방안이 모색되었으나 온건국가와 강경국가들간의 의견일치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됨에따라 동 사태 해결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다. 즉, 1991년 2월 유고 베오그라드에서 개최된 15개 비동맹국 외상회의에서는 유고 및 인도측이 제시한 걸프사태 관련 平和協商案이 알제리, 쿠바등 강경파 국가들의 적극적인 반대로 무산된바 있다. 이는 오늘날 국제정치문제 해결에 있어서 비동맹의 역할이 크게 축소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증명해준 계기가 되었다.

第5節 東北亞 平和協議會議 推進

1. 東北亞 平和協議會議 提議의 背景

제2차 세계대전후 국제관계를 지배하여온 냉전구조는 1970년대의 데탕트를 거쳐 198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공산권의 내부 변화를 바탕으로 보다 근본적인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되었다.

1970년대에는 동·서 관계 개선을 배경으로 양독관계가 정상화되면서 유럽에 평화공존 구조가 정착되기에 이르렀다. 동·서독은 1972년 12월 21일 東·西獨 基本條約을 체결하고 1973년 9월 18일 UN에 동시 가입하였으며, 미국은 1974년 동독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서독·소련간의 외교관계는 이보다 훨씬 앞선 1955년 9월 13일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동·서독 관계 및 동·서독과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배경으로 NATO, 바르샤바조약기구 등 35개국이 참가한 「歐洲 安保 및 協力에 관한 會議(CSCE)」가 1973년부터 헬싱키에서 개최되어 1975년 7월 30일 헬싱키 협정이 채택됨으로써 유럽은 전후의 현상을 인정하는 기초위에 구주국가간의 평화공존을 추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구주에서의 냉전구조하의 평화공존으로의 발전과정은 1990년대 동북아에서의 평화정착과 협력의 가능성을 크게 提高하였다.

오늘날 한반도에는 아직도 160만이 넘는 군대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팽팽한 군사적 대치상태를 계속하고 있으며, 남·북한간에는 通信, 通行, 通商의 그 어느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을 정도로 교류의 단절을 겪고 있다.

1950년 북한의 남침에 의한 6.25동란과 그후 수많은 무력도발은 말할 것도 없이 최근에만도 1983년의 탕군사건, 1987년 KAL기 폭파사건 등을 북한의 변함없는 대남정책 때문에 한반도의 긴장이 아직도 완화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급선무는 내용있는 남북대화를 통하여 우선 남북한간에 긴장을 완화하고相互信賴를 구축하며 남북한간 다방면에 걸친 교류를 통하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있다. 그리하여 통일이 될 때까지 남북한이 상호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잠정적 체제를 하루속히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남북한간의 진지한 협상과 주변국가와의 관계개선을 통한 국제적 여건의 조성이 상호 병행되어 추진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진지한 태도로 대화에 임하고 나아가改革과開放의 길로 나가도록 유도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의 일환으로 제6공화국 출범이래 북방외교를 적극 추진하여 소련 및 동구권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동·서독 관계 정상화 및 미·소·영·불등 독일분단 관련국가들의 동·서독과의 관계 정상화가 있고서야 구주의 평화공존을 정착시키기 위한 헬싱키과정이 시작될 수 있었듯이, 남·북한간의 긴장과 동북아 4강의 남·북한에 대한 비정상적 관계를 그대로 두고서는 냉전의 마지막 유산인 한반도와 동북아에서冷戰構造를 종식시키고 평화질서를 형성할 수 없다.

노태우 대통령이 1988년 10월 18일 제43차 UN총회 연설을 통하여 동북아 평화협의회의를 제의한 것은 이러한 배경하에 우선 남북한간의 긴장완화와 화해를 위한 획기적 노력을 傾注하는 동시에 이를 촉진시키는 국제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동북아 관계국들간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을 위해 협의하고 협력하는 다자적 틀을 마련함으로써 높은 긴장과 불신감으로 이어져온 남·북한간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平和共存關係를 정착시키며 동북아 국가간의 냉전적 국제관계에 중지부를 찍어 동북아에 새로운 평화구조를 정착시키는 길을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적 외교전략의 포석이었던 것이다.

2. 推進方向

세계의 여러 지역에는 지리적, 역사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한 여러가지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지역기구가 성립되어 그 지역의 공통문제를 협의하고, 역내 국가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유럽의 NATO, CSCE, EC 및 EFTA, 중동의 걸프만협력위원회(GCC), 아랍연맹(AL), 아프리카 국가간의 아프리카단결기구(OAU), 동남아의 ASEAN, 미주국가간의 미주국가기구(OAS), 남태평양의 남태평양포럼(SPF), 최근 발족한 아·태지역의 APEC등이 그 예이다.

동북아에는 이러한 地域協力機構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지만, 최근에 이르러서는 우리나라의 동북아 평화협의회의 구상외에도 몽골이 역내 8개국간에 亞·太 東北諸國 정부간 협의를 제의하였고, 소련은 동북아에서의 군축논의 및 전아시아과정(All-Asia Process)과 1993년 아·태 외무장관회의 개최를 제의하였으며, 호주는 CSCE와 유사한 아·태 국가간 안보관계대화체제를 제의하였고, 카나다가 북태평양 7개국간의 안보협력 협의를 제안하는등 아·태 지역에서의 多者的 協議를 추구하는 추세가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동북아 평화협의회의 제의는 앞으로 冷戰以後時代에 전개될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에서의 평화와 협력의 새 국제질서 형성을 염두에 둔 전략적 구상에 바탕을 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관계 당사국의 이해와 합의를 전제로 하는 만큼, 무엇보다도 미·일 등 전통 우방국의 이해와 협조가 불가결하며, 이들과의 긴밀한 협의하에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남북한 관계와 대중국 관계에 진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남북대화와 북방외교의 진전과의 긴밀한 연관하에 추진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렇듯 東北亞 平和協議會議 구상은 어느 시점을 정해 놓고 이를 추진하기 보다는 관계국간의 여러 차원에 걸친 다자적 협의와 정부 및 비정부간의 다각적 협력의 경로를 꾸준히 개발하고 경험을 축적해 나감으로써 그 바탕위에

동북아 관계국간의 협의와 협력의 틀을 형성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파악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노태우 대통령의 동북아 평화협의회의 제의 아래 정부는 이 구상의 추진을 위해 1989년 1월 1일자로 외무부 본부내에 실무 대책반(외교정책추진특별반)을 설치하는 동시에 외무부 산하 外交安保研究院에도 연구반을 설치하였으며, 그동안 국내 각계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서 동 구상의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중·소·북한을 포함한 관계국이 참가하는 국제 학술회의에의 적극적인 참가를 통하여 동 구상의 취지와 목적을 폭넓게 설명하면서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여 왔다.

이와 병행하여 미국·일본등과의 각종 정책협의를 통하여 이 구상에 관련된 공동인식 심화와 협조 방안을 논의하고, 이와 관련된 소련·중국·북한등의 최근 동향도 예의 주시, 검토하여 왔다.

미국은 이러한 구상에 대하여 原則的 支持를 표명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으로서는 다자적, 집단적 정치·안보문제 협의체 제의에 대하여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따라서 한국측의 구상이 미국의 安保實益과 부합되는 방향으로 상호 입장이 조정되도록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한반도에 국한하여 CSCE 방식의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일본은 이 구상이 발표된 이후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협력의사를 보이고 있는 반면, 북한은 이에 반대하고 중국은 북한입장에 동조하였으며, 다만 소련은 공식 입장 표명은 없었으나 비공식 경로 내지 학술회의등을 통하여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앞으로 남북한 관계의 진전, 한국의 대중국 관계 개선, 북한의 대미·일 관계 개선등 변수의 추이 여하에 따라 이 구상의 추진에 보다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유럽에서의 통독 결과, 정치통합 과정의 진척이

동북아 지역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면 이 지역에서의 다자적 대화와 협력의 추세가 예상외로 진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亞·太地域 協力關聯 提議 對比表〉

명칭	당사국	목적	제의일시	비고
키신저가 제안한 한반도 관계 4자 회담	남북한 및 휴전회담 당사자인 미, 중(추후 일, 소도 참석 가능)	휴전협정을 보다 항구적인 장치로 전환하기 위한 협의	1976.9.30 키신저 당시 미국무장관이 UN 총회 연설시 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음에는 남북한 당사자 회담으로 시작하여 미, 중이 옵서버로 참가 - 회의에 전전이 있을 경우 미, 중도 참가 - 적절한 기회에 기타 유관국 (일, 소)도 참가
고르바초프가 제안한 동북아 국가간의 군축 회의	소, 중, 일, 남북한(미국)	동북아 지역의 해군력과 공군력 감축	1988.9.16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크라스노야로스크연설에서 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르바초프 연설에는 미국이 제외되어 있으나, 소련 학자들은 미국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고 언급
한국이 제안한 동북아 평화 협의 회의	남·북한, 미, 소, 일, 중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협력 증진을 위한 6개국간 다자협력	1988.10.18 노태우 대통령이 제43차 UN총회 연설을 통해 제의	
고르바초프가 제안한 All-Asia Process	아·태지역 국가	아·태지역 문제 정례적이고 다자적인 협의	1989.5.17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북경 인민대회장 연설에서 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련은 후르시쵸프가 「아시아집단 안전 보장」을 제의한 아래 유사한 제안을 해왔으며,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집권후 All-Asia Security Conference, All-Asia Conference 등을 제의해 왔으나 역내 국가들의 반응은 미미하였음.

명 칭	당사국	목 적	제의일시	비 고
몽골이 제안한 아·태 북동제국 정부 간 정기 협의 (8자 회의)	남·북한, 미, 일, 중, 소, 카나다, 몽골	8개국간 정치, 경제, 무역, 문화 등 제반분야에서의 교류체제 확립	1989.8.27 바트문후 몽골 공산당 서기장 이 제의	
카나다가 제안한 북태평양 안보 협력 협의	남·북한, 미, 일, 중, 소, 카나다	정보교환, 군사훈련 통보, 영공 개방등 신뢰구축 문제 협의 장차 해군력등 북태평양 지역 군비 통제 문제 논의	1990.7.17 클라크 외무장관이 카나다 빅토리아 상공 회의소 연설에서 제의	- 다자간 협의와 군사적 개념 보다 광의의 안보 문제를 포함하는 협력 안보 개념 제시
호주가 제안한 아·태 국가간 안보 관계 대화 체제	아시아 국가	냉전체제 종료에 상응한 아시아국가간의 안보 관계 대화	1990.7.19 에반스 외무·무역 장관이 모나쉬대학 연설에서 제의	- 유럽의 CSCE와 유사한 대화 체제
소련이 제안한 아·태지역 외무장관 회의 개최	모든 아·태지역 국가	안보, 군사, 경제, 환경, 과학 협력 협의	1990.9.4 쉐바르드나제외상이 제2차 블라디보스톡회의 개최 연설에서 제의	- 향후 아·태 정상회의 개최도 희망
소련이 제안한 아·태지역 안전을 위한 협의기구 설치	미, 일, 중, 소, 인도	단계적 접근을 통한 아·태지역 안보 논의	1991.4.17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일본국회 연설에서 제의	일·소간에 군사문제 대화 → 미·일·소간 군사적 신뢰감 조성 → 미·일·중·소·인도간 안보 협력 협의